

한·중 통상분쟁의 해결과 한국의 대응

The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s Preventive Measures of Korea

이 승 영*

Sing-Young Lee

이 건 형**

Keon-Hyeong Lee

〈목 차〉

- I. 서 론
- II. 한·중 무역과 중국의 통상정책
- III. 한·중 무역의 분쟁사례 개관
- IV.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 V. 결 론 : 한국의 대응

주제어 : 무역분쟁, 분쟁해결, 한중무역분쟁, 김치분쟁, 중재합의

* 동국대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 中國 清華大學, 經濟管理學院 博士課程

I. 서론

중국은 최근 주요 세계시장에서 연이어 통상분쟁에 휘말리면서 무역방식의 전환과 함께 수출산업 구조의 획기적 재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중국산 가죽신발, 컬러TV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과 EU의 수입 자동차부품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제소 결정 등으로 주요 무역상대국과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상품이 전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와 견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의 통상분쟁은 그런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적 시각이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1년 동안 WTO 회원국이 제소한 반덤핑 사례의 약 17%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WTO 회원국 가운데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과의 통상분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를 비롯하여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개발도상국들도 중국 상품으로 국내 산업이 교란되고 있으며 무역 중재 및 구제조치를 위한 조사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투자와 생산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로 소진할 수밖에 없어 통상분쟁이 잦아지고 세계 최대의 반덤핑 대상국이 되는 구조적 여건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¹⁾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 중국은 한국과 산업 보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분쟁, 환경문제 그리고 자원제약으로 인해 공업, 투자 그리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자로서의 문제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은 국내의 기존 정책으로 거시적인 통상문제들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나 외부적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서비스 부문과 노동 집약적 산업 우위의 무역분쟁에 따른 새로운 통상 정책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얼마전 한국의 대표적 식품인 중국산 김치에 대한 비위생적이라는 정당한 보도는 식품안전을 거론한 것이지만, 이는 한국산 휴대전화, 자동차 등 공산품의 수입규제로 이어져 한·중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항시 잠재해 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이 21세기가 열리며 한·중 통상협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그만큼 양국의 통상 분쟁 및 갈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국의 통상당국은 국제적 기준에 충실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협력모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발 산업국의 경제 개발에서 나타나는 국가 지원적(state-facilitated) 경제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2000년 이후 韓·中간의 무역거래 분쟁사례를 개관하며 분쟁의 원인,

1) 예를 들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약 40달러. 판매가격 중 20%는 공장을 설립한 외국기업에, 37.5%는 중간유통과 판매상에, 35%는 부품제조업체에 돌아가고, 나머지 7.5%만이 공장의 몫이다. 공장은 이 돈으로 임금과 전기료, 기타 모든 경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吳敬璉(우정련), “蘇州(쑤저우)의 마우스 생산 공장의 사례”, 新華通信, 2006.7.2.

유형 및 처리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한국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및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한·중 무역과 중국의 통상정책

1. 한·중 무역의 확대와 과제

중국은 2000년도 21세기를 맞으며 균형과 분배정책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5년 9.9%, 2006년 8.9%의 성장을 보였다. 세계은행(IBRD)은 2007년 증가율이 9.6%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앞으로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경제규모가 2016년에는 일본을, 2040년에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대외교역이 GDP의 53.5%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위안화 절상 압력, 유가 상승, EU의 수입 쿼터제 폐지 등으로 연착륙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은 원자재 확보, 첨단 선진기업 인수 합병 등 해외시장 확대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중국이 2041년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미국과 담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변화와 가능성의 중국을 여전히 경제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와 경제적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아시아 경제의 선봉 자리를 중국에 내주어야 할 때를 앞당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2006년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619억9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규모의 21.8%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해외 직접투자액 63억9000만 달러 중 39.3%를 차지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의 제1수출국이자 제1투자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이 늘수록, 중국의 대한 무역수지가 감소할수록 양국 간의 통상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은 늘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시장의 응비와 그에 따른 위협에 노출된 한국의 과제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중국의 규모의 경제와 노동력에 밀리지 않도록 기술연구와 개발투자를 늘려 생산극대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한국은 노동집약형 중소기업 투자에서 탈피해 중국이 중시하는 에너지 및 환경 분야 등 하이테크 산업으로 투자를 전환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개방일정과 발해만, 서부 개발계획 등에 맞춰 금융, 유통 및 내수시장을 겨냥한 서비스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

넷째, 중국과의 가격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특정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설비과잉과 반덤핑 규제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우리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중국의 법 제도와 관행을 정확히 파악해 분쟁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²⁾ 한국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최대 규제대상국이다.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물론 선진 산업 국가들도 무역 자유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상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기관과는 별도로 선진 산업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통상협력은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06년 현재 미국 상품의 50% 이상이 캐나다와 일본 그리고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 나라들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더 성장한다면, 그것은 한국으로서는 자국 상품의 수출을 위한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개발도상국들이 지금보다도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면, 그만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발국의 성장이 선진국의 성장에도 이익이 된다는 대의를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중국의 통상정책과 대외적 마찰

후발 산업국들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론은 선형적인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국제경제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속에 항상 나타나는 수출우위의 경제 정책의 문제는 정부가 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해 주는 근거로 사용돼 왔다. 또한 경험적으로 한국, 특히 최근의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정부의 국가 주도적(state-facilitated) 경제발전 정책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외교역 활성화와 무역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국제무역에 관여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나타나게 될 각종 지표들을 무역상대국에서 왜곡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오늘날 국제 경제체제에서 후발 산업국들이 직면한 공통의 대외경제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2000년 이후 2006년 까지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시장 안착률은 43.3%에 불과하다.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은 20%에도 못 미치며 1999년 이후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중 100개 이상이 청산됐다. 청산 기업회수한 투자 자본은 2150만 달러로 투자액의 38.4%에 그쳤다.

첫째, 정책의 불균형이 민간 경제주체가 생산적인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둘째, 통상정책의 조정이 충분한 투자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역 상대기업 산업적 조건들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을 경우에 불가피하다.

셋째,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이 고도로 집중된 산업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기술발전이 지체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환경의 외부성(Environmental externalities)은 특정한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수반되는 환경 비용이 가격체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생겨나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적절하게 생산·소비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특히 후발 산업국들이 대외 무역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은 어느 정도까지 현행 국제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충돌하고 있다. 특히, 몇 가지 규정들은 도하라운드 하에서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조항들이 얼마만큼 개발도상국들이 취할 독자적 발전 전략들을 제한하는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정책들이 어느 정도까지 분쟁해결의 이름으로 구속력을 지니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정책수입을 위축시켜 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된 사례들을 선별하여 실제로 어떻게 해당 분쟁이 조정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한 나라가 다른 국제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금지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를 제소한 후 분쟁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다루어진 사례의 25% 이상이 바로 이 산업정책들에 놓여져 있었다. 이는 전체 90개의 사례 가운데 25% 이상이 개발도상국들이 국내 산업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WTO분쟁사례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WTO 규정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여러 가지 분쟁사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후방 산업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해당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분쟁해결 메커니즘(DSM, Dispute Settlement Mechanism)의 핵심은 개발도상국들이 취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이 WTO 규정을 위반하는지를 판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산업정책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즉, 중국은 향후 철강, 자동차에 이어 개별산업에서 산업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집단화가 성공하면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돼 역수입이 급증하고 세계시장 경쟁에서 한국기업들의 점유율이 잠식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상산업정책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향후에도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있어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가의 지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중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에 달하고 중국이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Ⅲ. 한·중 무역의 분쟁사례 개관

한국 정부는 2006년에만 해도 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7월), 전쌀에서 표백제 검출(8월), 김치에서 납 검출(9월), 차(茶)에서 납 검출(9월) 등 중국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판정을 내렸었다. 이에 중국은 한국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연이은 유해물질 검출 판정을 받으면서 쌓였던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여기에서는 2005년 발생한 김치 분쟁과 기타 현실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분쟁사례들을 살펴본다.

1. 김치 분쟁사례 검토

김치가 한·중 무역분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국에서 제조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김치에 각종 이물질과 기생충 알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성급한 반응을 보임으로,³⁾ 오히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체면을 세계적으로 손상했다. 한국은 기생충 알이 어떠한 경위로 생산된 제품에서 나왔는지, 얼마만큼 위험한지, 또 그 생산시설은 누구의 소유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전체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 파급효과와 대처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고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1) 분쟁의 경위 및 원인

중국산 김치의 한국 수출은 2005년 7만6천 톤에 이르고, 2006년에는 2,155만 달러가 수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5년 중국산 수입김치 일부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어 중국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의 파문이 커지고 국내산은 괜찮으나는 의문이 확대되자, 기생충 전문가 2명의 자문을 얻어 국

3) 중국은 음식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불량 성분을 혼합한 분유를 마신 영유아들이 죽는 사고도 있었고, 메틸알코올로 제조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집단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중국산 음식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이 깊다. 실제로 한국 또한 중국산 유해식품의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그간 한국에 수입된 중국 식품이 문제가 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표백 전쌀, 농약 인삼, 중금속 고추, 탄저균 양념, 발암물질 뽕장어 등이 무역 마찰을 일으킨 바 있다.

산 김치에 대한 기생충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정부는 기생충 알은 시간을 다룰 정도로 인체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며, 더구나 미성숙란만 검출되어 인체 감염우려가 전혀 없다며 분쟁을 완화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유해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발표해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에 앞서 2004년 중국산 수입김치가 국내산에 비해 납함유량이 최대 5배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식약청은 서둘러 과잉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산 김치만 해도 502개 품목이나 되는데 중국산을 포함해 58개 제품의 납함유량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김치가 안전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야당에 식약청이 조사한 제품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한·중 김치분쟁이 통상마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00년의 양국간 극심한 갈등이 우려되었으나, 양국의 무역 조건 및 관행이 크게 달라진 만큼 김치분쟁이 더 격화되지는 않았다.

중국산 김치 재료로 쓰이는 배추와 무는 주로 산둥성과 요녕(遼寧)성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곳 수만 가구의 크고 작은 농가에서 배추와 무를 김치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내 한 농업 전문가에 의해 중국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인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분 사용이 김치에 기생충 알이 묻어 있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임이 밝혀졌다. 중국에서 인분으로 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포기마다 인분을 조금씩 주는 방법, 인분을 밭에 뿌린 뒤 흙을 뒤집는 방법, 그리고 퇴비에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이다. 이중 퇴비에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 외에는 기생충 알이 배추와 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분 재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재배를 하도록 하여야했다.

불량김치를 양산하는 영세한 중국내 김치공장은 100곳이 넘는다. 이들은 주로 산둥성 및·요녕성에 몰려 있다. 북경 인근에도 국내 유명 브랜드와 북한의 해당화 김치공장이 있지만 국내에 수출되지 않는다. 국내시장을 겨냥한 김치는 산둥성과 요녕성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이다. 산둥성의 경우 靑島 및 煙臺에는 60여 곳이 넘는 김치공장이 성업 중이다. 이들 공장은 한국인과 중국인 조선족에 의해 운영된다. 불량김치가 주로 만들어지는 곳은 영세한 김치공장이다.⁴⁾ 한국인과 조선족이 경영하는 김치공장 중 일부가 이 부류에 속한다. 오히려 중국공장 중에는 위생시설이 완비된 초대형 공장이 많다. 일본자본이 투입된 대형 중국 김치공장도 8군데에 이른다. 이들 공장에서는 가공 야채와 김치를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김치 파동이 중국 내 한국 김치산업을 위축시키고 중국의 대형 김치공장이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치 파동 이후 중국 정부가 강력한 위생기준을 적용, 한국인과 조선

4)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미발간자료 및 경제상무담당 영사 인터뷰 내용, 2007. 4.

족에 의해 운영되는 영세 김치공장을 퇴출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불량 김치 파동에 중국 검역당국이 보복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국내산 화장품의 안전성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김치공장이 하루에도 한 곳이 생기고 한 곳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치 공장의 부침은 심하다고 한다. 한국과 조선족이 운영하는 영세 김치공장 일수록 이 같은 일이 허다하다. 국내 수입업자의 김치 수입가격 경쟁도 문제다. 베이징에서 김치를 생산하는 생산원가는 kg당 2400원 안팎이다. 그러나 산둥성에서 국내 수출을 위해 생산되는 김치는 400~500원에 불과하다. 위생 설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상태에서 싼 가격에 김치를 만들어야 하니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지하수를 이용, 큰 통에 담긴 배추를 발로 씻고 녹슨 기계로 김치를 담그는 중국 김치공장의 현 주소는 수입업자들의 이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 분쟁의 처리 및 결과

김치 파동 이후, 중국은 김치 제조업체가 생산시설의 위생을 강화하지 않는 한 생산 허가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실리적 이익에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자금이 모자라 도산하게 될 한국 업체를 중국 기업이 인수, 중국 자본이 세계적인 먹거리 김치산업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였다. 결국 중국산 김치가 비위생적이라는 한국 언론의 당당한 보도에서 촉발된 양국의 무역 분쟁은 한국 김치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김치 분쟁은 한국과 중국 정부 간에 식품검역협의를 발족시켰다. 우리 통상교섭본부와 중국 국가질량검사총국(질검총국)의 차관보급 이상이 대표를 맡는 고위급 식품검역협의를 발족을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것이다.⁵⁾ 한국은 김치문제가 한-중관계 전반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중국도 공감을 표시했다. 양국은 김치문제가 통상마찰 등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원만한 해법을 찾아서, 고위급협의를 발족시키기로 한 것이다.⁶⁾

식품검역협의를 대표로 한국 쪽에서는 차관보와 중국은 질검총국의 차관급이 임명되었다. 중국 측이 김치 분쟁을 적절한 선에서 봉합하였고, 한-중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었다.⁷⁾ 중국산 김치의 납 검출에서 국내산 김치의 기생충 알 검출로까지 이어진 최근의

5) 통상교섭본부 관계자기 이를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정치·통상 이슈를 망라한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외교·통상 장관급 양자회담을 열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들을 점검했다.

6) 중국 외교부 리 부장은 한국산 김치 관련 소식을 전하며 “섬유 제품과 항공기, 자동차 등 김치보다 어려운 사안들도 모두 해결됐다. 최근의 김치 분쟁이 양국간 무역 관계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CCTV도 “중국산 김치의 한국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국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하다. 천억 달러 수준의 한·중 무역에서 김치 무역량은 극소량이다. 양국 무역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안된다.”고 보도했다.

김치 분쟁은 유해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하는 등 식품안전 당국의 경솔한 대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통상 마찰에 따른 자국의 막대한 무역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과 중국 당국은 각각 김치 파동이 무역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원했다.⁸⁾ 특히 양국은 이 미 농·수산물 검역 문제를 해결할 기구로 한·중 검사·검역에 관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중 무역규모 확대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문제 등이 무역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늘 파동 당시처럼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김치분쟁이 마늘파동처럼 악화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 양념장 등의 식품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면 보복적인 조치로 수입금지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김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 한·중 양국 간에 김치를 놓고 미묘한 갈등을 보이는 수준이었다. 중국의 추가 조치에 따라서는 개별 상품 분쟁을 넘어 한·중 무역 전쟁으로 변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식품 안전을 거론하고 있지만, 무역 보복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⁹⁾

- 7)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영국·독일·스페인·한국 순방 및 아펙 정상회담 참석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을 통해 “김치 문제는 두 나라가 평등 호혜의 원칙 아래 유연성과 인내를 가지고 토론할 때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부장은 이날 ‘김치 분쟁’에 대해 “세계 어디에나 김치처럼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식품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제통상 규정과 객관적인 표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김치보다 더 비싼 상품에 관한 분쟁도 잘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 △경제무역 투자 협력 문제 △문화 교류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8) 마늘파동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00년 6월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수입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율을 최고 285% 포인트를 상향 조정하자, 중국측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한국산 휴대전화 및 섬유에 대해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로 맞섰던 대표적인 한·중 통상마찰 사례였다. 2000년 ‘마늘 분쟁’ 2000년 우리 정부는 1500만 달러 상당의 중국산 마늘 수입을 막기 위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은 곧바로 5억 달러 규모의 휴대전화 및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치로 맞서 ‘마늘 분쟁’으로 비화했다. 당시 중국산 마늘에 고율의 긴급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참담할 정도였다. 중국은 마늘 수출과 휴대전화 수입 등을 연계하는 대응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마늘 수출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WTO에 중국이 가입한 이후 이런 임의적인 ‘무역 보복’은 불가능하다.
- 9) 중국 검역당국이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 등 7개 국내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기생충 알 검출을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통상 보복’ 성격이 짙다. 중국 당국의 이번 강경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 김치에 대해 기생충 검출 결과를 발표한 지 10일 만에 맞대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한 김치와 고추장에서 기생충이 검출됐는 지를 두고 한·중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었다. 중국측은 “(한국과 농수산물 교역이 가장 많은) 산동성 검역당국이 한국 농산물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 그러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 수출한 김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두산의 경우에만 현지 공장을 운영해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식 통관절차를 거친 한국산 김치가 없는 만큼, 기생충 알이 나왔다는 발표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추장은 고열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완제품에서 기생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2. 기타 분쟁사례 검토

(1) 가금류 분쟁

중국이 조류독감 파동 이후, 한국 정부에 냉동 가금육(닭고기)의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여, 무역갈등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한국정부는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원천 차단하였다. 2006년 2월 제2차 한·중 검역검사협약에서 중국정부가 냉동 가금육 수입 허용을 공식 의제로 제기하였다. 세계 2위 가금육 생산국가인 중국이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수입 허용을 요청해 왔고, 한·중 검역검사 협약의 의제로 정해진 만큼 검토와 협의를 해야 했다.

한국의 농림부는 중국산 닭고기 문제가 과거의 마늘파동이나 김치분쟁과 같은 무역보복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식품안전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중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웠다. 중국산 닭고기는 중국내 AI 발생으로 열처리 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중국도 한국에서 AI가 발생하자 2005년 11월부터 한국산 가금류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중국에서는 2005년 10월에도 寧夏回族自治区 銀川(인촨)에서 AI가 발생했으며, 지난 2003년 이후 인체 감염으로 14명이 숨졌기 때문이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AI도 유전자 분석결과 철새에 의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달리 국토면적이 넓은 만큼 가금육 수입 금지를 나라 전체가 아닌 AI가 발생한 쑤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국제관행에 따라 AI 발생 이후 90일이 지난 뒤 추가발생 사실이 없으면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추가발생 사실이 없더라도 상대방 국가가 납득할만한 AI 방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¹⁰⁾

(2) 자동차부문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에 따라 2004년 507만대에서 지난해 560만대, 2010년 101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4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세계 3대 자동차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외자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2005년 현재 1082만대(승용차 693만대, 상용차 389만대)에 육박했다. 판매증가를 초월하는 급속한 설비확장으로 가동률은 2003년 65%에서 지난해 52%로 하락했다. 폴크스바겐, GM, 도요타 등 중국 진출기업의 설비확장계획에 따르면 2010년 총생산능력은 1747만대로 확장되

10) 지난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胡錦濤(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기생충 알 김치파동으로 불거진 양국간 갈등을 비롯한 식품위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한·중 검역검사협약의 역할이 주목된다.

고, 이 중 승용차는 1262만대(비중 72%)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자동차 내수시장은 당분간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그 성장세는 대폭 둔화될 전망이어서 점차 공급과잉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¹¹⁾

중국 정부는 2006~2010년 시장점유율 15%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업체의 독자모델 개발과 완성차 및 부품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010년 100만대, 2015년 200만대 이상으로 확대돼 한국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자동차 공급과잉도 심각하다. 2010년 중국의 승용차 생산능력은 1262만대로, 2006~2010년 승용차 수요가 연평균 35.3% 증가해야 공급과잉이 해소되는데 이 정도 폭발적인 수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중소형차의 차별화와 함께 중대형급에서 일본을 앞설 수 있는 품질·성능·디자인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품업체들은 수출주력 품목의 선정 및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기업들의 현지화를 포함한 중국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한·중 FTA를 추진해 한·일 FTA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 기대된다.

IV.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1. 분쟁의 해결 및 전략적 대응

(1) 한·중 무역분쟁의 원인 및 해결

중국시장은 교역규모면에서 9월말 현재 858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18.3%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약 1.8배인 15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어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중 교역의 53%가 가공무역 형태여서 중국의 가공무역금지품목 확대는 한국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국내 기업의 무역분쟁 상대국을 보면 중국(25.9%)이 가장 많고 미국(22.6%), 일본(20.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고 무역마찰 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역투자협력확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반덤핑조사 사전협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도 맺었다.

11) 중국 내수가 2010년까지 매년 10% 이상 성장해 2010년 1010만대(승용차 570만대)에 이를 것이다. 현재의 설비확장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된다면 중국 자동차산업의 평균가동률은 2010년 57.8%에 그칠 것이며, 특히 승용차는 45.2%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양해각서 체결은 1992년 한·중수교이후 13년 만에 양국 교역이 12배 이상 증가, 2006년 한·중 교역이 1천억 달러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중 경제협력관계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¹²⁾

한·중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는 업계간 무역대화 채널구축 지원과 수입급증품목 조기 경보체제 구축 및 반덤핑조사 사전협의 강화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협력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한·중간 무역확대로 인한 무역마찰을 사후분쟁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한 사전 예방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완조치가 요구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 및 대중국 무역분쟁 해결방안을 위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한·중 수출입 위축,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축소로 인한 중국진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현지법인이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의 원가를 재분석하고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으로 전환해 수출입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또 가공무역 규제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한 중국 정책변화주시, 중국 내수시장 공략, 가공무역을 위한 중국진출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

한·중 무역에서 공급과잉 문제가 중국 내 생산조절로 완화되지 않고 대량 수출로 연결되는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유입 확대로 국내 상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 국내 업계도 경영 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다.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유지와 함께 국내시장 상황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각종 기준의 강화, 비관세 장벽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과 중국의 발전지향적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일부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종 상품들을 수출하는 경쟁국들의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판결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생산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상대국도 기꺼이 국제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중국에 확신시켜주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관들은 이미 타결된 협정 내용이 개발도상국들에 부과할 구조조정 비용, 예컨대 관세수입 충당, 직업 훈련 등에 따른 비용을 새로운 정책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의 무역통합메커니즘(Trade Integration Mechanism)과 관련된 조항들은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안됐다. 양자간 협정은 현실적으로 비대칭적 협상력(asymmetric bargaining

12)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양해각서는 한·중 수교 20주년인 2012년 한·중 무역 2000억 달러 달성,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무역마찰 사전예방체제 구축, 한·중 양방향 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한·중 양국이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power)을 악용하는 협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양자간 협정들은 진정한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지닌 나라들을 협상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후발산업국들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2) 한국의 전략적 대응

중국이 철강산업에서 제품 생산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고급강에서 수입대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중국 완성차의 본격적인 수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 내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 자동차 업체의 수출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현대차가 중국공장을 늘리려고 하니, 엔진기술 이전을 요구했듯이 앞으로 기술과 시장을 교환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응전략을 가져야 한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 따라 진출 기업에 대한 옵션이 다르고 리스크도 다르다. 현대차가 광둥지역 진출을 시도하면서 기술 이전 비율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기술을 놓치지 않으면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압박은 철강,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2006년 중국 내 LCD·PDP TV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중국 현지업체와 소니, 마쓰시타 등 일본업체의 가격경쟁이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맞춰 대중 수출상품, 특히 부품과 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함으로써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품과 소재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을 갖추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중국산업의 공급과잉¹³⁾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쟁압력의 심화를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됨과 동시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질적 수준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급과잉 문제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들의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급과잉 문제는 또 단순히 총계 기준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부품목별로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철강의 경우처럼 공급과잉 실태는 품목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

13) 공급과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급과잉이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문제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급과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자료가 일부 과장되었을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공장과 설비의 파산 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 실제 경제적 의미는 없으나 통계상으로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및 기업별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중국경제의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중국 독자브랜드가 한국시장과 세계시장에 나오면 우리 제품의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개발상황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 국내 정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수출 의존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대미·대일관계, 타이완 등 국제분쟁과 국제관계에 취약하다. 위협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를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국과의 무역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독자브랜드 확보를 통한 선진적인 수출국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도 저가 제품의 양적 수출 보다는 한·중 양국간 보완상품을 개발하고 질적 수출로 전환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우선 양적 수출에 기인한 한·중 무역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한·중 무역정보망 구축

먼저 중국 경제 관련 기본정보는 물론 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중 무역투자정보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 교류와 협력 확대, 양국 기업들, 특히 양국 학자들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양국 기업들에 필요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이미 2006년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했고 무역투자협력 및 무역구제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의 통상정책과 법률, 경제 및 시장 동향, 무역·투자 환경, 기업 및 상품 정보 등을 DB를 통해 관리하고, 전문가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요청하면 전문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들에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고 그룹화 하는 등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양국간 통상 마찰 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중국통상환경 감시체제

위안화 절상, 철강 공급과잉 등 중국 통상경제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취약하다. 정부, 연구기관, 협회의 분산된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 통상환경 감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학회, 중재학회 등 관련 학회,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철강협회, 자동차협회 등 유관기관, 그리고 중국 현지 및 통상 전문가, 기업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기존 시스템이 중국 관련 단순정보 중심이라면 감시체제(모니터링 시스템)는 무엇보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처방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통상관련 학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구를 통하여 중국기업들의 생산량 증가, 중국정부 긴축재정 유지 가능성, 임금상승, 노동력 부족현상심화, 태업현상 발생 등 다양한 위협들을 계량화 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통상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무역위원회의 활성화

미국의 경우, 미관세법 337조를 통해 국제무역위원회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에 대해 신속·강력한 수입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소송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강력하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크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대한상사중재원도 미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를 실시,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수입을 중지하는 조치를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역 피해여부를 무역위원회가 심의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조직, 예산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¹⁴⁾

1995년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상품뿐 아니라 자본, 기술, 노동 등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 및 기업경영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이 같은 흐름에 기인해 급증하고 있는 한·중간 통상규모의 확대에 따라 무역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무역자유화가 확산되고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무역 분쟁과 마찰 발생의 소지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¹⁵⁾ 따라서 무역피해 규제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산업부문과 기업이 희생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국제무역규범 준수강화

무역분쟁이 빈번해 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국제통상의 규정과 국제무역규범이 그만큼 복잡 다양해지고,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반덤핑·세이프가드·보조금 및 상계관세 등 무역제도를 중요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 분야들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 개별협정으로 다루고 분쟁해결절차도 개선하였으나 우무과이

14)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무역위원회 업무 특성에 맞게 전문조사인력을 일정 비율까지 충원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상임위원수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선정, 당해 조사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판정문 작성 등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15) 2000년 대 이후 한·중간 무역·투자 규모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 분쟁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해준다.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WTO 무역구제제도와 분쟁해결절차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산업피해 관련 무역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¹⁶⁾

또한 국제 무역규범의 모호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세부규정이나 기준 때문에 WTO/DDA 협상에서도 이를 재협상 의제로 삼고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따라서 다자간 협정이든 양국간 협정이든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법규 정책과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간 무역의 자유화·개방화에 따른 수입 증가와 이로 인해 늘어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국내산업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무역 규범의 철저한 준수 및 국제무역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 한국의 대응

최근 중국산 구슬 장난감에 미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미국과 호주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었다. 또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바비인형이 리콜되었다. 이러한 공포는 공산품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과 식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마침내 ‘차이나 프리(china free)’ 라벨을 붙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건강식품업체도 등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이러한 문제의 최고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1차적 원인은 안타깝게도 품질이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싸면 된다는 식의 일부 무책임한 한국 상인이나 브로커에 있음을 확인하고 반성하며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 정부는 2006년에만 해도 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7월), 전쌀에서 표백제 검출(8월), 김치에서 납 검출(9월), 차(茶)에서 납 검출(9월) 등 중국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판정을 내렸었다. 이에 중국은 한국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연이은 유해물질 검출 판정을 받으면서 쌓였던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2005년 발생한 김치분쟁에서만 봐도 기생충 알 검출 사실을 발표하기에 앞서 유해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과 김치 산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무역분쟁은 무역량의 크기와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대비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06년도 총 수출입액 6,270억 달러 규모의 세계 10대 교역국가로 성장했으며, 무역규모의 증가와 함께 무역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6년에 조사대상 기업의 무역거래건수 평균 1.6%가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또한 1.4%의 클레임을 제기받아 전체 무역거래건수 3%의 클레임이 발생한 것

16) 무역분쟁 발생시 수출국과 수입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조항을 달리 해석하거나, 여러 나라들이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WTO 회원국간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WTO패널에 제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무역분쟁의 주요 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두됨에 따라 무역클레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대중 무역분쟁에 대비해 전문지식을 축적한 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한·중 무역분쟁은 분쟁원인이 단순해 예방이 가능하고 한·중 양쪽 기업체의 공동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무역클레임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중재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삽입할 것이 권고된다.

중국과 한국간의 무역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절차상의 문제에 집착하였다. 김치분쟁의 경우에 WTO가 정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00년 마늘분쟁의 경우처럼 분쟁이 쉽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한국은 신중하지 못한 클레임으로 그 파급효과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나,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끝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로 끝났다. 따라서 기업과 행정당국은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할 것이 기대된다.

끝으로 공산품 대중 수출의 2%를 차지하는 한국의 김치, 가금육 등 농축산물 수입이 한·중 무역 전반은 물론 양국의 발전지향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상생적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무역 당사자의 합의된 계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이다. 업계의 환경·윤리경영 및 국제적 표준의 상관행이 동아시아 시장에 뿌리내리어 한·중이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중근. “한중 마늘파동을 통해 본 관세의 중요성”, 「요즘 국제화시대에 국제간의 정치」, 한국관세사협의회, 2003, 3,19.
- 문돈. “국제무역체제의 탄력장치 (Flexibility Measures) :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과 이후 변화에 대한 연구”,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 pp.56-72.
- 최은경. “중국과 수입쿼터 마찰”. 「해외지역정보」, 9월, 수출입은행, 2005, pp.72-74.
- 대외경제연구소. 한·중 경제통상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 교역액 2천억 달러를 향하여, 국제학술대회, 쉐핀스키호텔, 베이징, 중국, 2005, 11.22.
- Alee, Todd L. 2002. “The Selection of Trade Disputes for International : Examining the Motivations for Launching Dispute Actions before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Paper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Boston, MA. 2002, August 29-September 1.

Schwartz, Warren and Alan O. Sykes. “The Economic Structure of Renegotiation and Dispute Resolution in the WTO/GATT System.” A paper prepared for a conferenc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2001, April.

Sykes, Alan O. “The Safeguard Mess : a Critique of WTO Jurisprudence.” *World Trade Review* 2 : 2003, pp. 261-295.

산업자원부. 한·중 무역정보망구축의 필요성. 2005.

(http://epic.kdi.re.kr/epic/epic_view. 검색 : 2007.7.7.)

외교통상부. 韓·中 정부 “김치 분쟁 대화로 풀자. 2005.

(<http://blog.daum.net/fanrubo/4142947>, 검색 : 2007.7.8.)

吳敬璉(우정련). “蘇州(쑤저우)의 마우스 생산 공장의 사례”, *新華通信*, 2006.7.2.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4/04/yonhap>, 2007.7.9.)

SBC News, (<http://www.koreasbc.org.cn/index>. 검색 : 2007.7.9.)

주한 중국대사관. 상역담당 영사 인터뷰, 2007. 4.

ABSTRACT

The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s Preventive Measures of Korea

Sing-Young Lee

Keon-Hyeong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erms of broad industrial policy concept and to derive some solution. It provide first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basic theory for the trade polic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o see how the trade policy evolved the different stage of option and then try to highlight features of China's trade policy development after the capitalization. An attempt is also made to review the trade dispute in Kimchi in order to identify what are the underlying reasons for policy failure. Finally, we will try to suggest trade strategy with major policy directions which could be relevant for trade development of Korea today.

The trade dispute issue with China has been newly coined referring to Korea's weakening economic stance among the two powerful Asians countries, China and Korea has always been closed partners geographically and economically. The study has stressed that the Koreans should not recoil from the trade crisis but to consider it as an opportunity. Rapidly growing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has heightened the importance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dicating conversion in specialization from vertical to horizontal, according to the economic research so far. This paper has proposed strategy to cope with any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Key Words : Trade Dispute, kimchi Dispute, Chinese Trade, Arbitration